

NORTH KOREA STRATEGY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김호섭·이정훈·한용섭·황재호

NORTH KOREA STRATEGY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 김호섭 · 이정훈 · 한용섭 · 황재호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인 쇄 2013년 7월
발 행 2013년 7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1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한디자인 (02-2269-9917)
인 쇄 처 한디자인 (02-2269-9917)

ISBN 978-89-8479-713-0 93340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공식정책은 더욱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Contents

요 약	vii
I. 머리말	1
II. 통일외교안보 환경	5
1. 세계정세	7
2. 동북아 정세	9
3. 한반도 정세	11
III.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목표와 전략기조	17
1.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목표	19
2.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전략기조	23
IV. 대북정책 기본 방침과 추진 과제	27
1. 기본 방침	29
2. 추진 과제	36
V. 외교정책 기본 방침과 추진 과제	45
1. 기본 방침	47
2. 추진 과제	48
VI. 안보정책 기본 방침과 추진 과제	57
1. 기본 방침	59
2. 추진 과제	60



VII. 맺음말	73
참고문헌	77
최근 발간자료 안내	79

표목차 Contents

〈표 IV-1〉 「신뢰 모색 단계」 TRUST INDEX	35
〈표 IV-2〉 「신뢰 구축 단계」 분야별 과제	35
〈표 IV-3〉 「신뢰 제도화 단계」 분야별 과제	35
〈표 VI-1〉 역대정부의 국방비 배분	65
〈표 VI-2〉 최근 5년간 방위산업 수출 실적(2007-2011)	70

그림목차 Contents

〈그림 IV-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로드맵	34
--------------------------------	----

요약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구분	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튼튼한 안보 ▪ 평화로운 한반도 ▪ 평화통일 기반 구축 ▪ 기여하는 세계국가 	
전략 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포괄적 방위역량의 강화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 분단관리와 통일준비의 조화 ▪ 글로벌 넥서스(global nexus)에 기반한 신뢰외교의 추진 	
추진 과제	대북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 대내외 통일 인프라 강화 ▪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토대 구축
	외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받는 국제사회 모범국가 ▪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 한·미동맹의 현대화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 ▪ 다층별 전략동반자관계의 심화 ▪ 글로벌 경쟁력과 파트너십 강화 ▪ 기여외교 확대 ▪ 문화·공공외교의 강화
	안보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의 확립 ▪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포괄적 방위역량의 강화 ▪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강화와 주변국과의 국방협력 강화 ▪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 보람 있는 군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I. 머리말



최근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제2기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내세우면서 한국, 일본, 호주와 동맹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질서의 모색을 위해 미·중은 경쟁관계 속에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협력 구조와 북·중 관계의 대치 국면이 변하고 있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도발·위협에 대해 중국이 전과 달리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태도 변화는 지난 수년간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함으로써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켰다는 반성에 기인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북·중 국경 통제강화 조치 등을 통해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최룡해 특사에게 북한의 비핵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세”라고 했으며, 6월 27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의 태도 변화는 비핵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한·미·중 협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한·중 협력 증진 노력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크다. 즉, 한·미동맹의 강화에 대응하여 중국은 한국을 압박하기 보다는 달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우선 정책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한·중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동맹의 이완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의 진전은 북핵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이 최근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김정은 정권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례 없는 국제공조 체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가 동북아 정세에 중요 변수로 남아있다. 끝으로 한·중 관계의 급작스러운 진전에 대하여 일본은 매우 당황하고

있으며, 일본의 소외감은 이지마 참여의 방북과 같은 돌출 행동의 반복을 가져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외교안보정책의 부동의 축이고 한·중 관계 진전이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미·중 협력이 한·미·일 협력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최우선 국가정책으로서 외교안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등 국제환경의 동시다발적 도전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은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관련부처 간의 협조와 조정을 원활하게 하며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특히 안보위협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외교안보의 환경을 분석한 후,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목표와 전략기조를 제시하고, 대북정책, 외교정책, 안보정책 등 분야별 기본방침과 추진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통일외교안보 환경



박근혜정부가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할 향후 5년간 세계의 안보 환경은 변화하는 국가 간의 힘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파워센터의 등장으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를 비롯한 중동의 정세는 불확실하고 유동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모든 국가들에서 거의 동시에 신지도부가 등장했으며, 각국 정부는 새로운 외교정책하에 국가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영토와 역사문제를 비롯한 갈등요소도 상존하고 있어 동북아 정세는 협력적 요소와 갈등적 요소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정책과 선군정치 노선의 고수로 인해 한반도의 정세는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 핵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한반도의 정세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하게 되면 남북관계가 진전하고,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전개될 세계와 동북아, 한반도의 안보정세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계정세

세계정세는 네 가지 특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21세기에 들어와 국제사회에서 국가들 간의 힘의 분포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때문에 국가들 간에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20세기 말의 세계는 미국중심의 단극질서였으나, 21세기 두 번째 10년은 다극질서로 변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군사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단극질서의 정상에 있으나,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가 안보질서의 변화에 점차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경제위기가 세계의 질서변화를 촉진했으며, 부상하는 중국을 비롯한 브라질,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질서가 다극질서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주권국가들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대두를 촉진하고 있다. 초국가적 도전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 대규모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초국가적 안보위협인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테러리즘, 해적, 마약, 조직범죄, 인신매매, 사이버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차원에서 정부 간의 협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비정부단체와 시민사회 등 이해상관자(stakeholders)들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초국가적 안보 도전과 위협은 비정부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이해상관자들, 시민단체 등의 협조에 의한 국내외 거버넌스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계경제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G20, 글로벌 핵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핵안보체제를 비롯하여,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련 이해상관자들의 네트워크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전통적인 군사적 이슈는 여전히 중요하며, 국가와 정부중심의 군사안보 증진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핵비확산체제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를 저해하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공조체제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군축 노력은 장려되어야 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중동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압박

은 계속될 것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부품들의 수출입을 막기 위한 확산방지구상(PSI)은 강화될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철수했거나 철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군사비가 감소되고 있지만, 동북아에서는 군사력 증강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는 전통적 군사 안보를 계속해서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중동지역의 국가 간 갈등과 국내 정치 불안이 세계질서에 중장기적 불안요소로 남아 있을 것이다.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내정 불안요소가 지역과 세계의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분쟁 가능성과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 간의 충돌 가능성이 지역의 불안요소로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중동의 정정 불안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동북아 정세

동북아시아 안보정세는 크게 보아 세 가지 도전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에 동북아 각국이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동북아의 안보정세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새 지도부가 신동북아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미·중 간에 신형대국관계의 설정을 둘러싸고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제2기 행정부는 세계의 전략적 중심이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아태 지역으로 옮겨 왔다고 간주하고, 미국의 국익을 보전하고 동맹국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과거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을 위주로 하던 과거의 수동적인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미·중 양국 간에 신형 대국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 관계는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익이 일치되는 분야에서는 협력을 지속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미·중 양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반대하여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표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협력한다든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상호 협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편, 미국은 감소하는 국방비의 압박 속에서 아태지역의 영향력 지속을 위해 일본, 호주, 한국, 태국, 필리핀 등과 양자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증가하는 국방비와 군사력에 대해 적극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주권과 영토 등에서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안보 면에서 갈등이 더 증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국가들이 사이버안보에 대해서 방어보다는 공격 중심으로 대처함에 따라 사이버안보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일본은 지도부의 역사인식 문제와 일본 내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흥이 일본의 대외 협력을 막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영토문제의 제기를 막기 위해 미국과 동맹 및 안보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나, 일본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은 한·미·일 3자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일본이 생각하듯이 한·미·일 3자 관계를 중국 견제를 위해 활용하려 한다면 의도한 대로 되지 못할 것이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의 한·미·일 공조체제를 부활시키면서, 대북한 관계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 결과는 미지수이다. 결국 북핵문제에 대해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 간에 행동통일 방향이 논의되면서 일본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5개국의 공통된 입장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셋째, 동북아 국가들 간에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정치와 안보관계는 역사문제와 영토문제 등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아시아의 패러독스’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은 발전된 상호 경제관계에 걸맞은 성숙한 정치안보관계의 발전이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 그리고 북·중동맹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양자관계는 발전해 있지만, 다자협력관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오바마 제2기 행정부는 FTA보다는 아태지역의 TPP를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FTA를 통해 경제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있어 양국 간에 FTA와 TPP를 둘러싸고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한·미 간에 FTA를 체결했으며, 한·중 간에 FTA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FTA와 TPP 간에 갈등을 창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들은 양자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다자 간의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한국은 고유한 위상을 활용함으로써 다자 간의 협력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반도 정세

2012년 4월 김정은 정권의 공식출범 이후 노골적인 권력투쟁이나 집단적인 반체제 활동과 같은 불안의 징후는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외형상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당·군·공

안기구의 감시로 통제요인이 작동하고 있으며 중국의 지원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몇 가지 대내외적 이유 때문이다.

첫째, 김정일 위원장과 같은 절대 권력자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어느 체제에서든지 권력의 공백을 초래하여 체제의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북한과 같이 인적 통치가 제도적 통치를 압도하는 체제에서는 위험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김정은은 김정일이 물려준 권력 핵심 구조를 조기에 해체하고, 군 고위층에 대한 빈번한 교체를 통해 충성심을 유도하고자 하나 실제로 이는 군 고위층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김정일 장례식 때 운구차를 호위한 7인 중 총참모장 리영호,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국가안전보위부 1부부장 우동춘,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정각 등 군부 인사 4명 전원이 물러났다.

총참모장은 현영철을 거쳐 김격식으로 바뀌었고, 인민무력부장은 김격식을 거쳐 장정남으로 바뀌었으며, 국가안전보위부장은 김원홍이 임명되었다. 한편, 총정치국장을 맡은 최룡해가 군의 실세로 급부상하였다.

둘째, 연소하고 경험 없는 김정은이 절대 권력자로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한은 강력한 군사력과 인민생활의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군사 부문에 대한 우선적인 자원 배분이 내부자원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대외 경제협력 확대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핵무기·경제 병진정책을 공식화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통해 재래식 군사력에 투입될 자원을 경제(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에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가용 내부자원이 부족한 북한에서 비현실적이다. 만일 북한의 숨은 의도가 핵무기를 지렛대로 미·북 협

상을 통해 외부자원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면,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모두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경제 병진 노선은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것이며 60년대의 국방·경제 병진 노선이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국방 분야에서 화학공업을 비료생산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셋째, 자주성의 역설이 가져온 불안정이다. 북한은 ‘대국’들 틈에서 어깨 펴고 살 수 있게 해준 것이 핵무기라고 얘기하지만, 그 핵무기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제적 경제제재를 받으면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라는 ‘대국’에게 자신의 먹고사는 문제를 의존하게 됨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수단이 역설적으로 자주성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의 과도한 의존을 하면서도 결국 중국 중국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미국과의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였으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확보에도 실패했고, 미·북회담의 재개에도 실패했다.

끝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이다.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실험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중요한 변화의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위협 등으로 북한이 중국에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도발·위협과 핵개발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북·중 관계의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변국들의 반발과 미국의 압박으로 오히려 중국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장되었을 때 중국은 북한을 두둔하며 미국의 군사적 시위에 대하여 힘의 과시로 대응하였다. 이는 동맹과 파트너십의 강화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과 만나면서 한·미동맹의 강화

를 가져왔다. 지난 수년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힘의 과시에 불안해하던 역내 국가들은 미국을 더욱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 역시 중국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이와 같은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등 국제환경의 동시다발적 도전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문제를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다.

그러므로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긴장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를 해소시키는 것을 당면한 안보과제로 떠안게 되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보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분단관리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2년 광복절 기념 KBS 여론 조사에서 79.3%의 국민이 현 안보상황이 불안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2/3의 국민들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의미하는 것이며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과 이에 대한 억지 실패, 북한의 정권교체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전쟁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계산된 반복적인 도발·위협에 의해 증폭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도발·위협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국민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의존하기보다는 68.5%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했고, 67%는 미국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지지했다.¹ 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 평화적 핵이용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도 북한의 핵위협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최근 김정은 정권의 강경일변도 태도는 과거 북한이 도발을 통해 위

1. 『한국경제』, 2013년 2월 22일.

기를 고조시킨 후 협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상투적 행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외부의 지원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 수 있다. 이 경우 충분한 외화 자금을 갖고 있거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경우이다. 사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곡물 생산이 400만 톤 이상 유지되고 GN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벗어나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은 단순히 생산량의 문제를 넘어서 분배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시장에서 식량이 매매되고 빈부차가 있기 때문에 식량의 증산이 반드시 식량난의 해소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이유로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이 호전되고 있다고 해도 중앙과 지방, 당, 정, 군의 핵심기관과 일반기관, 간부와 일반 주민들 간의 극심한 격차로 인해 혜택은 일부분에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12년 하반기부터 대중국 광물자원 수출의 감소세가 뚜렷해지는 등 북한의 경제사정이 여유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북한의 강경태도가 경직된 정책결정구조 때문일 수 있다. 대남 사업을 전담하는 통전부나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에 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핵실험 등 강경한 입장이 유지되고 있을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강경일변도 태도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하기보다는 북한이 이미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고립을 자초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미 몇 차례 경험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나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한·미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북한이 올해처럼 긴장을 고조시키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Ⅲ.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목표와 전략기조



1.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목표

“국민 여러분!

국민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국민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가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확실한 역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꿈꾸는 국민행복시대는 동시에 한반도 행복시대를 열고,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데 기여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역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을 것입니다. 나아가 세계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지구촌 문제에도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²

²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취임사-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정부는 국가의 안보를 튼튼하게 확보하고, 한반도의 신뢰프로세스를 증진시키며, 세계평화와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외교안보정책의 목표를 튼튼한 안보, 평화로운 한반도, 기여하는 세계국가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가. 튼튼한 안보

북한의 핵실험과 비대칭 군사력의 증강으로 한반도의 안보는 냉전 시대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와 북한의 빈번한 NLL 침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군사적 도발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킨 바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의 안보가 확고하게 확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첫 번째 외교안보 목표는 튼튼한 안보다. 튼튼한 안보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을 인식하고 박근혜정부는 어떠한 적의 도발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보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공감대와 지지기반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견고하고도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나. 평화로운 한반도

한반도는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빈번한 도발로 매우 긴장되어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급변하는 동북아와 세계정세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긴장과 대결에서 벗어

나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협력 관계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는 억지를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고으로써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을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가 지연될수록 많은 것을 잃고 고통과 피해가 커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핵을 포기하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보다 많은 협력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강력한 억지와 다각적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다가서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평화를 기초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며, 궁극적으로 정치통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³

통일은 상호체제 인정과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단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법적 통일”을 의미한다. 통일의 비전과 미래상은 대북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설정해주는 등대와도 같다.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⁴

통일에 대한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십이야말로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국제협력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다. 통일의 비전과 가치를

3.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 외교안보통일 정책 기조 및 과제 발표문, 2012년 11월 5일.

4. 위의 글.

확산하여 통일이 많은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경제번영과 국제적 위상 제고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은 원래 하나의 국가였으며 언젠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할 것이다.

라. 기여하는 세계국가

세계안보 환경은 세계화와 정보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세계안보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가운데 초국가적인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들 간에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중견국가로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하드파워를 결합한 스마트파워를 창의적으로 발휘하여 강대국과 약소국,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세계평화와 글로벌 협력에 기여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G20, APEC, OECD 등 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발협력 및 녹색성장 등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의제와 관련해 중견국 간 협력을 선도해 나간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모범적 개발협의체를 구축한다. UN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핵안보, 인권, 사이버 범죄 등 글로벌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한다. 공적개발원조 확충,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강화, 수원국 중시의 효율적 원조 지원 등을 한다.

2.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전략기조

가.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포괄적 방위역량의 강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도발과 전쟁 위협 등으로 한반도는 매우 긴장이 고조되어 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군비경쟁, 영토 및 역사 문제 갈등으로 안보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튼튼한 안보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가장 기초적인 복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비군사적 위협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지금까지의 남북한 관계는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왔다. 한국의 대북 정책은 유화와 강경 사이를 오고 가며 정권마다 단절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를 점진적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을 천명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기조는 억지와 대화, 안보와 교류협력,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이 세 가지 면에서 균형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⁵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통

⁵-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Vol. 90, No. 5 (September/October 2011).

일 등 각 분야별 통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된 조정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경제발전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

다. 분단관리와 통일준비의 조화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통일준비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대북정책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진보적 입장은 정부는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미룬 채 남북공존을 정착시키는 ‘통일 없는 분단관리’ 정책을 선호한다. 한편, 보수적 입장은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대북정책 없는 통일정책’이 될 수 있다.

사실 탈냉전 이후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의한 통일의 목표와 화해협력을 거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기능주의 통일 방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분단관리와 통일준비의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통일정책은 남북관계의 현상을 관리하는 분단관리에서 시작되며 분단관리는 남북 간 경색국면을 해소하고 화해협력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분단관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통일을 앞당기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통일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통일이라는 목표를 지나치게 앞세우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분단관리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통일을 감추고 남북공존이 목표인 것처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예컨대, 남과 북의 상이한 이념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남북연합에 조기에 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존을 넘어서 자칫 분단의 고착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통일은 남북이 하나의 제도와 하나의 이념을 갖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위기 예방에도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라. 글로벌 넥서스(global nexus)에 기반한 신뢰 외교의 추진

오늘날 세계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하나의 지구촌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가들은 치열한 국익 경쟁 속에서 글로벌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는 강대국과 약소국,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가교역할과 협력 넥서스를 창의적으로 건설하고 주도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를 갖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위치와 한류 등 한국의 매력적인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여 글로벌 문제의 의제설정과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을 선도하며, 진정한 세계화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유라시아 대륙 국가, 국제기구 등과 지도자, 국민들 간에 신뢰형성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신뢰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동북아에서 평화협력구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동북아 국가들 간에 경제적인 상호의존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 역사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불신으로 인해 정치와 안보 분야 협력은 미진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극복하고 동북아 국가들 간에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자적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을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⁶ 한

6. 박근혜 대통령, 『미국 상하양원 합동회의 연설』, 2013년 5월 9일

국은 동북아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기후변화와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문제 같은 연성 이슈부터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나감으로써 다자 간 대화 프로세스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IV. 대북정책 기본 방침과 추진 과제



1. 기본 방침

가.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

기존 대북정책은 모두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에 실패했다. 첫째,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경제적 압박 등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북한은 핵문제 의혹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90년대 초부터 핵무기 개발 자체에 대하여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고, 2002년 이후에는 핵무기 개발의 포기 가능성에 대하여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이 기간 동안 국제사회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북한과 협상에 매달리며 시간을 낭비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3년부터는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하고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내구력을 과소평가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도발·위협은 북한체제의 소멸과 함께 해결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난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력한 통제체제와 적절한 수준의 시장에 대한 방치를 통해 체제를 지탱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부족한 자원을 핵심부에 집중하고 주변부는 자체적으로 생존하도록 방치하였다. 당, 군, 국가안전보위부와 같은 권력 기구, 평양과 같은 지리적 중심부, 군수산업과 같은 기간산업 등에 자원을 집중하고 지방, 인민경제, 비권력기관 등은 방치하였다.

셋째, 북한의 의도와 북한의 내구력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공조를 방해했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1990년대 미·북 양자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에서 한국은 소외되었다. 2000년대 한국의 적극적 포용정책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 노력은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2008년 이후 한국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대하여 중국은 불만을 숨기지 않았고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안정을 최우선시하였다.

나. 신뢰

북한의 의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공유하고 정책 공조를 통해 한목 소리를 내는 것이 향후 효율적인 대북정책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력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은 한계가 있다. 대북정책의 수단을 경제적 유인책, 제재, 혹은 양자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며, 남북관계의 진전은 근본적으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신뢰의 수준에 맞지 않는 남북경협은 가능하지도 않고 추진해서도 안 될 것이다.

과거에도 남북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이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대북정책의 키워드로 ‘신뢰’가 사용된 것은 박근혜정부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대북정책에서는 무력, 제재, 협상, 전략적 인내 등과 같은 정책 수단을 둘러싼 논의가 주된 관심이었으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는 신뢰라는 무형의 인프라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⁷ 남북 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정책수단이 안정적으로 효과를 보고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⁸ 대북정책의 수단이 아닌 남북관계에서 무형의 인프라인 신뢰에 관심을 갖고 신뢰의 수준에 맞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구상했다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7. 국가의 내부에서도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있어야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듯이, 국가 간에도 신뢰가 필요하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구승회 옮김,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한국경제신문사, 1996); 박근혜 대통령 후보 언론 인터뷰, 2012년 9월 1일.

8. 정책수단과 신뢰의 관계는 스포츠에서 기술과 체력의 관계와 같다. 체력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체력이 강할수록 기술을 습득하고 구사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간에는 북한의 비핵화, 남북경협, 대북 인도적 지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 많은 과제가 있다. 신뢰가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신뢰가 없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상호이익이 된다면 적대 관계에서도 공동 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신뢰가 축적되어 신뢰수준이 높아질수록 남북 간 난제들을 더 빨리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인도적 지원의 경우 신뢰가 축적됨에 따라 분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마치 상거래에서 신뢰가 높을수록 변호사, 계약서, 담보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이다.⁹ 북핵문제는 지난 20여 년간 양자회담, 6자회담, 제재, 포용, 무시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사용해 봤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신뢰가 쌓이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사찰과 검증체계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게 되고 핵 문제도 진전이 될 수 있다. 핵 문제가 진전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남북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신뢰수준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신뢰를 쌓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남북관계의 모든 이슈들을 핵 문제와 연계 시켜서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문제가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신뢰는 일련의 검증된 행동을 통해 벽돌을 쌓듯이 다음 단계로 나가자는 것이다.¹⁰ 신뢰는 극적인 이벤트를 통해 급진전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축적되는 것이다. 일단 신뢰가 축적되고 나면 신뢰에 바탕을 둔 남북

⁹ 후쿠야마, 『트러스트』, p. 52.

¹⁰ 박근혜 대통령 후보 편집인협회 토론, 『연합뉴스』, 2012년 7월 16일.

관계의 진전은 후퇴할 가능성이 적다.

둘째, 신뢰는 대북정책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남북경협의 규모를 키우는 등 정책수단의 효과 증진에 기여한다.

셋째, 신뢰의 수준은 일종의 남북관계 발전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큰 규모의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신뢰수준이 낮으면 교류협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넷째, 신뢰는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이거나 일방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수많은 도발을 잊거나 북한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¹¹ 남북 간 신뢰가 바닥이라고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도발한다면 신뢰가 바닥을 지나서 마이너스로 가는 불신의 단계가 될 것이다. 이 경우는 안보문제로서 당연히 단호하게 대처한다.

다섯째, 신뢰는 남북 간 신뢰뿐만 아니라 국제적 신뢰와 국민적 신뢰를 포함한다. 남북 간의 신뢰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남북관계는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지 않는 대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의 정도에 따라 신뢰 모색, 신뢰 구축, 신뢰 제도화의 3단계를 거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장애물 제거는 바로 신뢰

¹¹-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의 모색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지원은 적정 규모 내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비롯한 상응한 대응이 없다면 신뢰가 쌓일 수 없을 것이며 신뢰가 없다면 남북관계의 진전은 어려울 것이다. 신뢰 모색 단계에서 신뢰 인덱스를 만들어 남북 간 상호 주고받는 항목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뢰 모색 단계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신뢰가 쌓이면 신뢰 구축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 구축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신뢰와 인도적·사회문화적 신뢰 등 분야별 신뢰 구축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신뢰의 구축 정도와 성과에 따라서 군사적, 정치적 신뢰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신뢰 구축은 분야별로 신뢰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 구축 단계가 지나면 남북 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신뢰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경제공동체를 거쳐 통일로 가는 통일준비가 본격화될 것이다.

대북 정책의 또 다른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하며, 핵개발이 아니라 경제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림 IV-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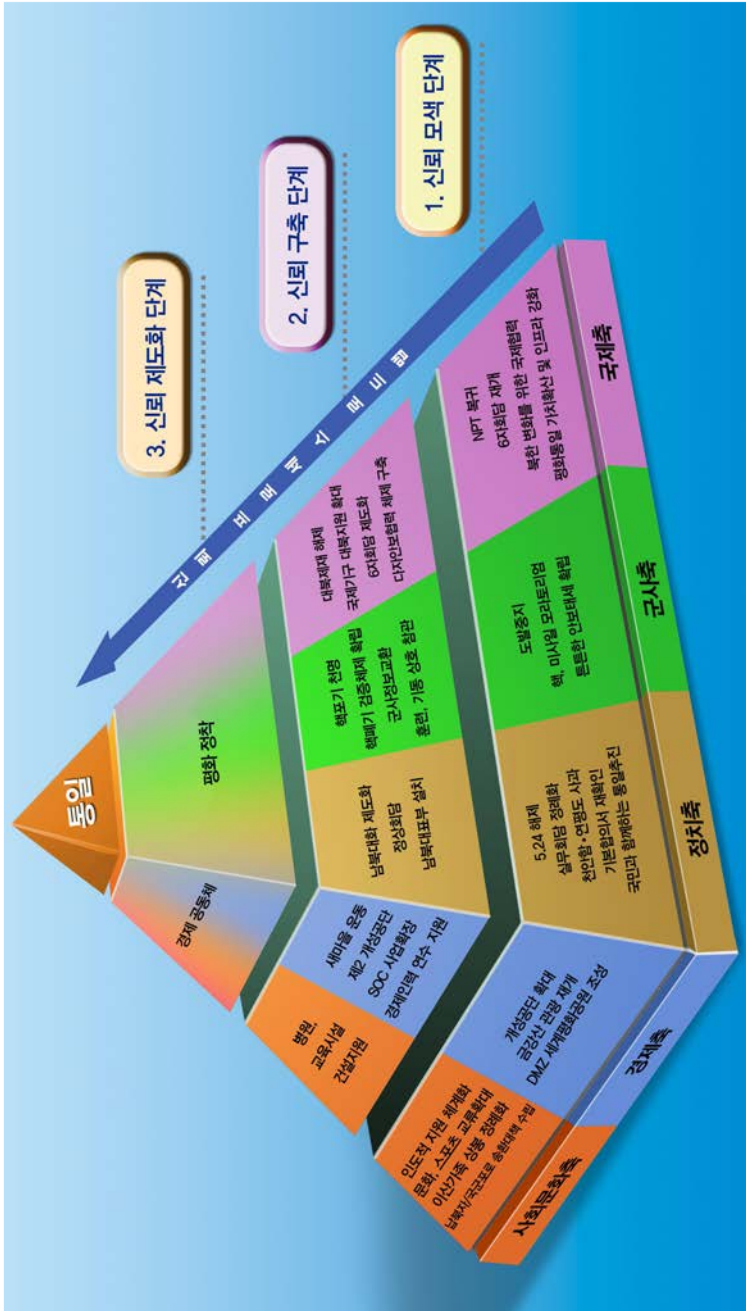


표 IV-1 「신뢰 모색 단계」 TRUST INDEX

대한민국 / 작용	북한 / 반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4 조치 3단계 해제 발표 (① 선별적 방북 허용, ② 남북교역 재개, ③ 북한 선박 우리 수역 항해 허용) • 수해지원 포함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 금강산 관광 재개 • 기존 개성 공단 확장 • 기본합의서 재확인 • IMF, World Bank 등 대북 지원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공식 사과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 납북자·국군포로 송환대책 수립 •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발사 모라토리엄 • 핵개발 및 실험 모라토리엄 • UNHCR을 포함한 국제 인권 단체 활동 허용

표 IV-2 「신뢰 구축 단계」 분야별 과제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경제적 신뢰구축	인도적, 사회문화적 신뢰구축	국제관계 신뢰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회담 • 남북대화 제도화 • 남북 대표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 포기 천명 • 학폐기 검증 체제 확립 • 군사정보 교환 • 훈련 및 기동 상호 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교류협력 제2개성공단 조성 • 금강산 관광 재개 • 농업기술 협력 • 새마을 운동 지원 • 북한 경제인력 연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상봉 제도화 • 북한 주민 복지 향상 • 교육 학술 교류 • 예술 문화 교류 • 스포츠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에서 남북 협력 • 대북지원 국제 NGO 협력 • 국제사회의 남북 관계 개선 지지 • 다자안보협력 체제 구축

표 IV-3 「신뢰 제도화 단계」 분야별 과제

평화 정착	경제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회담, 실무회담 제도화 • 군비통제 및 평화체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보완적 경제협력 • 북한 경제발전 지원

2. 추진 과제

가.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1)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 추구

인도적 지원 분야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되어야 할 영유아와 산모를 위한 ‘영양지원과 의료품과 의류 등 생필품이 포함된다. ‘영양’은 비타민과 비스킷, 분유 등으로 식량 및 비료지원과 구분한다.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한다.

(2) 남북 간 대화채널 구축 및 기존 합의의 존중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및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하며 국제기준에 기초한 대화 관행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상호존중과 평화’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되, 구체적 이행은 국민합의와 안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NGO 방북, 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냉각기를 벗어나 이산가족 재회, 인적 지원의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당국 간 대화를 위한 사전 정치작업을 한다. 또한, 연평도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금강산 관광과 경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회담을 가질 수 있다. 비핵화 프로세스 진행과 함께 점진적으로 대화의 급을 상향 조정하고 기존의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한 논의를 한다.

나아가 총리급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화해공동

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출범, 적절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고려한다.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할 핫라인 설치를 한다.

(3)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신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합의한 것을 지키는 것은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만, 세부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다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해 남북한이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면서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거대담론이나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쉽게 실천할 수 있고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 경제교류 및 사회문화 교류를 업그레이드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나간다. 특히 학술, 종교 등 다방면의 사회교류를 내실화한다. 남북한 주민 간 친화력 확대 차원에서 북한지역의 전통문화를 한국사회에서 복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통일 후 북한 엘리트들에 대한 관용 원칙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 엘리트들과 일반인들의 성공 사례 만들기에 관심을 갖는다.

나.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1) 튼튼한 안보 태세 확립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출발점은 튼튼한 안보이다.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는 강력하고 신뢰할만한 억지력을 강화한다. 억지가 실패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와 협의하여 모든 가능한 정책 수단을 고려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다.

“저는 우선 안보를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나아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북한은 도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핵개발이 아니라 경제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¹²

(2)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추진

신뢰 모색의 초기단계에는 경제교류 협력이 우선되겠지만,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류협력은 한계가 있다. 정치·군사적 신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북한은 오랜 기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중국이라는 후원 국가를 통해 상쇄하였다. 중국의 새 지도부와 북핵문제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심이 있는 중견국들에 대한 외교 강화를 통해 국제여론을 주도한다.

북한 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가 지연될수록 많은 것을 잃고 고통과 피해가 커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핵을 포기하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보다 많은 협력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강력한 억지와 다각적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패는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 일관된 정책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이 동시에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¹²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

(3)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비무장지대(DMZ)는 1953년 한국전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서쪽으로 예성강과 한강 어귀의 교동도에서부터 판문점으로 지나 동해 고성의 명호리에 이르는 155마일(약 250km)의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 2km 면적으로는 약 10억 m^2 의 완충지대를 이루고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생태환경 문제 조사 협의 특히 지뢰 등 군사 시설물의 안전한 제거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와 함께 DMZ 내에 있는 남북 대치의 극한점인 휴전선 감시 초소(GP)의 상호 단계적 철수도 중요하다. 이러한 복합적 사안의 협의 제의에 대해 북한의 수용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구축의 큰 틀에서 DMZ 내 세계평화공원 문제를 NLL 문제와의 연계 속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북측의 관심과 호응을 기대할 수 있다.

다. 대내외 통일 인프라 강화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적 발전

학술세미나 및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전 방향을 공론화한다. 특히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한다는 국정과제와 연계시킨다.

국내외 통일·북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2)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추진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초당적 협조 노력을 강화하고 통일교육 강

화를 통해 국민적 통일 의지와 통일 역량을 결집한다. 그리고 탈북민 정착지원 인프라 및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냉전 시기 통일과 대북정책은 국가중심, 정부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냉전 종식 이후에도 대북정책은 경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서 남북 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기능주의 통합방식의 취지와는 달리 북한당국만을 상대하였다.¹³ 이는 근본적으로 북한 시민사회의 부재에 기인하나, 남북한 주민들 간 친화력 확대를 위한 노력 역시 부족했다. 친화력 확대 노력은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주민의 생필품난 개선 지원, 탈북 주민들에 대한 배려 등이 포함된다.

신뢰는 남북 간 무형의 인프라로서 통일 이후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통일한국은 자연스럽게 신뢰사회의 기반을 갖추게 될 수 있을 것이다.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은 국가나 정부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통일과 대북정책의 핵심 주체임을 말해 주고 있다.

(3)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

국민여론조사에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영양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면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확대한다.¹⁴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이산가족

¹³ 이는 과거 정치, 사회, 이념 운동이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독립운동기를 거치면서 국가와 주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국가위주의 통일이 아닌 민족공동체 또는 사회 위주의 통일을 이루자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즉, 남과 북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를 이룬다면 궁극적으로 정치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역발상인 것이다.

상봉 정례화 및 영상 메시지 교환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북한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남북 간 양자관계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노력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북한주민들도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통일시대를 열어갈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과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¹⁵

(4) 평화통일 가치 확산과 기반 조성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¹⁶

남북한은 원래 하나의 국가였으며 언젠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에 필수적이다”라는 합의를 도출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여야 한다. 또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통일교육, 재정 준비, 법적·제도적 준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신뢰 구축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고 동북아 공동 발전·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비전을 적극 제시한다. 나아가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넓혀가는 통일 외교를 능동적

14. 대북 인도적 지원이 초기 신뢰프로세스의 시작과 같이 때문에 인도적 지원 물품, 양, 시기,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15.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

16. 위의 글.

으로 추진한다.

(5) 대북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대북정책은 가시적 성과가 당장 나타나기 어려운 분야이다. 특히 인내력 있게 원칙을 지키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전략수립과 대북정책 인프라 구축에 소홀히 해서 안 된다. 양질의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고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앞으로 다가올 기회와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남북회담 시 북한에 대한 요구조건과 줄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정책 전문가, 대북정보 전문가, 남북대화 전문가 등을 유지 보강하고,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북정책의 컨트롤 타워와 각 부처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라.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토대 구축

(1) 북한 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북한은 오랜 기간 체제 생존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국제사회와의 연계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제적 압력을 피해왔으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중국이라는 후원 국가를 통해 상쇄해 왔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특히 중국과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하자원, 농림수산, 삼림 등 일차산업에 외부의 기술과 자본 유입 지원과 북한의 시장경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스웨덴, 호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확대하

여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대북 지원 국제 NGO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남북이 동시에 가입된 46개 국제기구에서 전문적이고 기능적인 협력에 초점을 둔 양자 혹은 다자협약체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2)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

동북아 신뢰 구축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고 동북아 공동 발전·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비전을 적극 제시한다. 나아가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넓혀가는 통일 외교를 능동적으로 추진한다.

(3)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추구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

테러, 환경, 인도주의, 재난 대응 등 협력이 용이한 비전통적 안보 협력을 추진한다. 그리고 남북협력과 동북아의 갈등구조 완화를 위한 다자 간 상호 협력의 틀을 마련하여 동북아 차원의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한다.

(4) 북방 3각 협력 추진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이익과 평화조성을 위해, 에너지·물류 등 남·북·러 및 남·북·중 3각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도 적극 모색한다.

V. 외교정책 기본 방침과 추진 과제



1. 기본 방침: ‘넥서스 외교’로 《존경받는 세계국가》를 향하여

한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은 그 국가의 특성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분단과 6·25의 비극,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국제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외교 영역을 넓혀왔다. 대내외적 도전으로 인해 때로는 핵심적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토보호 및 정치적 독립이라는 기본 국가 목표는 충실히 지켜져 왔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핵심 국가로서 국력에 걸맞는 새로운 비전과 철학이 담긴 외교를 펼칠 때가 되었다. 특히 통일한국이라는 궁극적인 국가목표에 대외정책의 역량을 맞춰야 하겠다. 한반도 통일정책의 정당성을 주변국들에게 알리고 자유·민주 통일이 각국의 국익에 부합하다는 설득을 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한국 외교가 추구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동시에 적극적인 일반 외교 활동과 통상을 통해 작은 국가의 한계와 자원의 결핍을 계속 극복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즉, 외교와 통상은 우리의 먹고살기 위한 수단이다.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즉, 우리의 외교력은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을 올리고 존경받는 세계 국가를 만드는 데 필수불가결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다.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국제사회에서 펼쳐나갈 우리의 외교 목표와 활동을 아주 적절하게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넥서스(nexus) 외교’이다.

‘연계외교’라고도 칭할 수 있는 넥서스 외교는 신뢰와 소통을 통하여 인류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다리를 놓아 흩어져 있는 섬을 잇듯이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한국을 중심으로 연계를 맺으면서 외

교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한국의 고유한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고려하고 한국외교의 강점을 활용하여 국가들을 연계하며, 협력하게 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함을 뜻한다. 기존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외교 수단을 활용해 국제적 연계망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면서 우리의 핵심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전진한다는 구상이다.

참고로 NEXUS의 영문 의미는 “something that communicates, relates, connects, binds”이고, 청소년들이 즐기는 실시간 전략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도 NEXUS는 공간 이동을 도와주는 연결점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의 상징과 본이 되는 동시에 아시아권 내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 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넥서스 외교를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 해결 전에는 나설 명분이 없고, 중국은 이미 G2 강대국으로서 주변국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에 넥서스 외교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힘들다. 동남아시아는 개별국가들의 국가역량이 부족하고 글로벌 협력의 주도자로서 적합한 이미지가 부족하여 중심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 지역의 참된 넥서스 파워로서 지역 현안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을 담당하면서 주도적으로 제시할 명분이 있는 것이다.

2. 추진 과제

넥서스 외교에 기초하여 우리 외교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신뢰받는 국제사회 모범국가

신뢰는 비단 남북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신뢰외교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환경조성 역할을 한다.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능동적 외교를 펼치는 동시에 책임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글로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로부터 신뢰받는 국가,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적 국가로서 그 국력에 부합하는 국제기여를 할 수 있다. G20, APEC, OECD 등 다자협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발협력 및 녹색성장 등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의제와 관련해 중견국가들 간의 협력을 선도해 나간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모범적 개발협약체를 구축한다. UN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핵안보, 인권, 사이버 범죄 등 글로벌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면서 공적 개발 원조를 확충하고,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서 효율적 원조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나.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아시아 패러독스란 동북아시아에서 국가 간 경제협력이 진전되고 있지만 동시에 군비경쟁과 역사 및 영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 중시와 중국의 부상으로 역내 질서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역내 갈등관리와 협력 축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은 심화되고 있지만 복잡한 역학관계, 역사와 영토문제,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북핵문제, 민

족주의로 인해 불신과 갈등이 깊어지는 안보 패러독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동북아 지역의 갈등구조를 다자 간 상호협력의 틀로 전환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역내 신뢰와 상호협력 구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안이다. 기후변화, 재난구조, 대테러, 환경 등 비교적 협력이 용이한 비전통적, 비군사적 안보 분야의 협력을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그 대상 영역을 전통적, 군사적 분야로 협력을 확대 심화한다.

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동맹은 60년이 넘게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지켜온 핵심 안보 축으로써 상호 의존 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비롯해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 안보 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함은 물론, 가치를 공유하며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미래지향적인 혈맹 관계이다. 21세기적 신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동맹으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한 글로벌 역할을 공동으로 추구한다.

이 축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양국은 지속적인 동맹 현대화 노력을 통해 군사동맹 차원을 초월한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여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어젠다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연계 체계를 만들 것을 목표로 한다. 21세기적 신념과 가치(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를 공동으로 추구하고 확대해 나가는 신뢰 동맹을 구현한다는 뜻이다. 2+2 대화의 정례화를 포함한 다차원 고위 전략대화를 제도화하고 북한위협에 대한 억제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신 한·미연합방위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FTA의 이행을 통해 경제동맹의 모델을 정립

하며 양국 간 지역적, 범세계적 공통 어젠다를 수립한다. 상호 윈-윈의 관점에서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및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 등 한·미 간 현안 문제를 성공적으로 타결함으로써 성숙한 동맹관계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중 양국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오로지 원칙과 신뢰에 기반해 정도를 걷는 길만이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앞으로 양국이 신형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국이 이미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시키기 위해 네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는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보다 안전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관계를 만든다. 한·중 양국은 아시아적 가치, 유교적 전통, 분단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 동아시아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 이 지역의 철학, 가치, 정책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한·중 양국은 공동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힘을 합할 수 있다.

둘째, 양국은 보다 발전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간다. 동북아지역은 안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로서 그 경제적 협력 가능성이 무한하다. 현재 양국의 교역규모는 2천억 달러 이상이며, 2015년 3천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역과 투자 협력, 공동 기술 연구개발, 공동 생산, 한·중 FTA 등을 통해 더욱 윈-윈 하는 경제협력모델을 만들 수 있다. 양국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촉진과 경제협력의 포괄적

합의의 바탕 위에 공동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셋째, 양국은 보다 개선된 인간안보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로 나갈 수 있다. 동북아지역은 국가 간 전쟁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나 테러, 국제범죄, 전염병, 불법이민, 재해재난, 환경오염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안보 위협이 증대되면서 인간안보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이 함께 초국가적 비군사적 안보 분야에 협력함으로써 인간안보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한국 주도의 통일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중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목표와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게 우리의 통일의 비전과 접근법이 중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 통일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기보다는 중국의 이익이 한국을 통해 더 잘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통일정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 다층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

일본과는 미래의 발전과 화해를 모색하는 성숙한 호혜관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한·일 간 역사적 화해와 갈등 축소 노력을 통해 올바른 양국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러시아와는 실용적,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수립해 한·러 양국 간 신뢰와 이해 증진의 ‘윈-윈 관계’로 공동 국익을 증진한다.

대륙별 맞춤형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지역과는 아시아적 공감대와 경제협력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 유럽/

오세아니아지역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경제협력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 중남미지역과는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와 경제지원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 중동/아프리카지역과는 한국형 발전모델 제공과 에너지협력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과의 안보협력 관계 강화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즉,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와 유사하지만 느슨한 지역 안보협력체계 구축, 동남아 테러문제 대응방안 및 국제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협력, 해상 교통로(SLOC) 보호 시스템 개발, 북핵 폐기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 국가 공조 강화, 아시아 지역의 역사 왜곡 및 잘못된 영토 주장의 시정 방안 모색 등이 의제에 올릴 수 있는 고려 대상이다.

바. 글로벌 경쟁력과 파트너십 강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FTA 주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달성하고, 중견국으로서 국제 경제협력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즉, 한·중 FTA에 이어서 한·중·일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네덜란드, 이탈리아, 인도네시아와 함께 중견국 경제협력기구 M7 CLUB 창설을 주도하며, 역내 철도, 에너지, 전력망 등의 동북아 SOC 협력망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를 한다.

사. 기여외교 확대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빈곤, 질병, 테러 등

국제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기여를 확대한다. 유엔 지원 사업과 공적개발 원조(ODA), 특히 취약한 인도적 지원 분야를 확충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최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DREAM KOREA PROJECT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연착륙, 그리고 문맹퇴치와 농촌계몽을 목표로 새마을 운동 개념 + 교육, 의료, SOC 등 포괄적 지원)’을 확산하며, 불안정한 국가들의 안정적인 치안 재건을 위해 평화유지 활동 등을 지원한다.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한국의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개발외교, 민주외교에 접목시키고, 이러한 방향으로 기여 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과 협력함으로써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진해 나간다.

아. 문화·공공외교의 강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역할 증대와 더불어 전통적인 외교방식을 초월한 K-Pop, 한류, 문화, 예술, 미디어, 언어, 원조 등을 활용한, 타국 국민을 직접 상대해서 우리의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이해의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익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추진한다.

공공외교 관련 범정부 통합관리 기구 혹은 위원회를 신설한다. 국무총리 직속 문화·공공외교 전담 기구 혹은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되며 문체부, 교육부를 포함한 범정부적 협조를 받아 운영한다. 해외문화원을 증설하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한국어교육기관 증설, 한국인 미술 갤러리·전시, 한국 관련 정기 강의, 해외 한국 석학 연계, 한류 박물관 및 공연 등을 추진한다. 해외문화원의 홍보 역할과 동시에 영국의 BBC, 미국의 CNN과 같이 국제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한 전문적 저널리즘을 양성하며, ODA 및 국제평화유

지활동(PKO) 관련 정부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을 것이다. 700만 재외 동포와의 공동체 교감 확산 위해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한민족공동체의 연대도 추진이 가능하다.

Ⅵ. 안보정책 기본 방침과 추진 과제



1. 기본 방침

안보정책의 추진 방향은 튼튼한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엄중한 북한의 핵위협을 비롯한 군사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에 근거하여 강력한 동맹협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이 확실하고 효과적이며 신뢰 가능한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킬체인(kill chain)을 포함한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억제전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략권 전환이슈를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과 변화하는 동북아의 정세에 비추어 한·미연합 전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만들고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는 한편, 주변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북한이 핵과 도발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국방 분야에서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전략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중기계획을 발전시키며, 거기에 부합하는 적정 국방비의 산출과 적정 국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민과 군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튼튼한 국방을 위해 단결할 수 있도록, 국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국방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방경영을 혁신함으로써 국방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며 그 첨단국방과학기술의 전략적 허브로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다시는 북한의 도발과 전쟁 협박에 흔들리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북한이 감히 협박과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튼튼한 국방을 건설하기 위해서, 온 국민과 군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동맹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 추진 과제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단호하고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를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안보 분야에서 5대 국정과제를 채택하였다. 첫째,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의 확립, 둘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셋째, 한·미 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과의 국방협력 강화, 넷째,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다섯째, 보람 있는 군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등이다. 안보 분야의 전략과제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와 국방부의 2013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한 것이다.

가.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의 확립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과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북한의 빈번한 도발을 막기 위해 국민이 신뢰하고 북한이 두려워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고하게 확립해 나갈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임기 초반에 북한의 핵전쟁 협박과 전쟁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며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경고를 북한에 보낸 바 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한·미연합 전력과 한국군의 합동 전력을 사용하여 즉각적이고 단호하며 강력한 응징을 시도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북한 도발에 대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대비계획을 세우며, 한·미연합으로 북한 도발 대응 연습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간에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합해서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전 지역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강화하며, 북한 도발 대응 교육과 훈련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한·미동맹에 근거하여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구체화하고 이행 가능하도록 한·미 양국 간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한·미 공동의 맞춤형 확장억제전략을 모든 경우에 비추어 이행 가능하도록 한·미 간의 고위급 의사결정기구를 갖추고, 확장억제수단을 구체화시키며,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공갈에 대비하여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의지와 능력, 태세 면에서 신뢰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독자적인 억제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한국이 북한 핵에 대해서 독자적인 억제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북한은 한국에 대해 핵으로 위협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인질로 삼고, 통미봉남 전략을 계속하여 구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타격능력을 갖추기 위해 탐지-식별-결심-타격에 이르는 일련의 길체인 역량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의 독자적인 억제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찰감시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정찰감시 능력의 예로는 특수전 부대, 군사위성, 글로벌 호크 등 무인항공기 등을 들 수 있으며, 정밀타격 능력의 예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무인기 등이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도 고려 대상이며, 주요 시설에 대한 방호 시설도 포함된다.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응징과 억지에 못지 않게, 우리 국민의 올바른 안보의식과 단결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이 안보의식을 강화시키고, 군이 확고한 정신전력을 갖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특히 6·25 전쟁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와 장병들이 한국의 현대사와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사랑 교육을 지원하고, 장병 정신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더 이상 한국 현대사의 성공과 업적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도록 국민의 안보의식 함양과 장병의 정신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력이 약하나 정신력이 강한 나라가 경제력은 풍부하나 정신력이 약한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일종의 제4세대 전쟁이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날 북한은 경제력이 우리보다 훨씬 약하나 북한군대를 김정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총폭탄이라고 선전선동하면서 국민일체를 도모한 가운데 우리에게 대해 전쟁 협박과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정신력을 강화하며 전 국민이 일치단결할 때에 충분하고도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이버전 통합 대비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국방부가 주도해 나갈 것이다. 최근 북한과 주변국들, 국내로부터 우리의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 공격, 소프트웨어 공격, 물

리적 공격이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그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1세기 전쟁이 정보전임을 강조하면서 전문 해킹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 전담 부대를 설치함은 물론 총참모부 산하에 수백 명의 사이버 전문요원을 두고 대남 사이버전, 심리전, 통일전선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박근혜정부는 적극적인 사이버 안보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첫째,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리의 사이버전 수행 및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 군 내에서 사이버사령부를 확대 개편하고 사이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사이버전 계획과 교전규칙 마련, 국방대와 합동군사대학, 각종 교류협력 대학과 군대 학교에서 사이버학과 신설, 사이버전사 양성, 관리프로그램의 제도화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의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진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나.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포괄적 방위역량의 강화

21세기 안보는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인간 안보,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위협에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북한의 비대칭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등에도 만반의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전략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방위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관련해서 한국의 독자적인 타격능력과 억제능력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위역량을 건설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능력을 증강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와

킬체인이 완성에 필요한 우리의 첨단 정밀 타격능력의 증강을 포함한 국방 중기계획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적정한 규모의 국방비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 중기계획은 위협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그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전력을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소요되는 국방재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기적인 기획방법이다. 지난 정부에서 작성한 국방 중기계획이 북핵을 포함한 비대칭적 위협을 총체적 혹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완전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에서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초국가적 위협을 포괄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의 토대 위에서 군사전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력건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방위역량의 건설을 위해서 국방비 배분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증가된 핵위협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국방비의 GDP 대비 및 정부재정 대비 비율을 상향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표 VI-1>을 보면,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감소하고 있고, GDP 대비 국방비도 2.5% 내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예산 중에서 복지, 경제, 교육의 비율이 국방비보다 훨씬 앞서 있음을 감안할 때, 국방비의 증액은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총력을 기울여 비대칭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우리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 일정 부분 이상의 국방비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국방비는 국력과 위협의 크기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 다른 국정분야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균형성의 원칙, 해마다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는 안정성의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을 조화시킨 중용

의 원칙을 존중해야 바람직하고 적절한 국방비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에서는 비례성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을 조화롭게 적용함으로써 2017년까지 GDP의 2.8%선을 지향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VI-1 역대정부의 국방비 배분

(단위: %)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정부재정증가율	14.7	9.3	8.7	5.6
국방비증가율	8.4	4.9	8.8	5.4
정부재정 대비	20.9	15.6	15.5	14.7
GDP 대비	2.74	2.34	2.46	2.53

출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새 정부가 추진할 국가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 2012년 10월 31일, p. 74.

또한, 분야별로 우리의 방위역량을 개선하고 증강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차기전투기 사업은 2013년 내에 기종을 결정하여 적기에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의 건설은 2015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우리 군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감시 정찰 능력과 사이버전 대응 능력도 단계적으로 확충되어 나갈 것이다. 중고도 무인정찰기와 군 정찰위성을 조기에 전력화함으로써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능력을 증강시켜 나갈 것이며, 사이버전 대응 능력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강화와 주변국과의 국방협력 강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 방향은 2013년 5월 한·미 양국 정상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에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에서 천명된 바 있다.

“지난 60년간 지켜 온 한반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확장역지와 재래식 및 핵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한 확고한 대한민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 (중략)

우리는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2009년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이행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한다. (중략)

북한이 도발로부터 양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노력과 함께 정보 감시 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는 공동 도전에 대응하고 동북아에서 평화협력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¹⁷

한·미동맹은 내용적으로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왔고,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 범세계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함과 동시에 앞으로 한반도가 비핵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공동 노력

17.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2013년 5월 8일.

해 갈 것이다.

국방 차원에서는 한·미 간에 『전략동맹 2015 비전』에 근거하여 전 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를 슬기롭게 관리하고 처리함으로써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전작권 전환의 최적 시기가 언제인지, 어떻게 이양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와 함께 우리가 전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국의 운용능력을 한·미연합으로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한국이 미국의 협조하에 전시작전통제권 연습을 몇 차례 시행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북한과 지역 국가들에게 전략적 틈을 보이지 않도록, 북핵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의 대응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신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공고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국방예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연합전투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의 병력을 그대로 한반도에 주둔시킬 것이라고 안보공약을 확실하게 한 점이다. 앞으로 한·미 간에 긴밀한 정책협의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불확실성 속의 한반도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동북아 및 세계정세에 대응해서는 주변국들과 양자 및 다자간 국방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한·중 양국 간에 전략 대화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군사적 분야의 신뢰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끌도록 전략대화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일본과는 우리의 국민정서와 일본의 역사인식을 감안하여 한·일 간에 신뢰를 조성하는 한편, 한·미·일 간의 안보 공감대 형성과 북핵에 대한 공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긍정적인 역할을 유도하고,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산기술협력을 증

진시켜 나갈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천명한 ‘동북아의 평화협력 구상’을 국방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운영 중인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서울안보 대화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차관급 인사들 간에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국방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며, 이들 참가국들이 한국의 구상에 공감대를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지하는 우방국들과 전략대화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양자간, 다자간의 국방대화를 발전시키고, 한국산 방산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측면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역내 다자 간 안보대화인 상그릴라 안보정상회의, 아세안지역포럼 등에 적극 참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자간의 안보 대화와 협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의 국방외교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지역 안보 방해 활동을 차단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와 급증하고 있는 초국가적 안보위협 즉,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테러리즘, 해적, 사이버 공격, 마약 및 인신매매, 조직적 범죄, 자연재해, 원자력 사고 등과 범세계적 도전인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환경문제 등을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적 및 국제적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데 한국의 국방이 앞장서게 될 것이다.

또한 PKO활동에 우리 군이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대학교 산하에 있는 PKO 센터를 외교부와 협업하여 국가의 위상과 역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국가급 기관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라. 혁신적 국방 경영 및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국방경영혁신은 민간기업에서 검증된 선진 경영기법을 군에 도입함으로써 국방업무를 혁신하고 국방예산의 절감을 도모하며 경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20세기말과 21세기에 선진국에서 민간기업의 우수한 경영사례와 경영효율화 방법을 국방에 적용시킨 사례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한국의 국방경영의 혁신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국방경영의 혁신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요소를 줄이고, 국방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한다.

최신 경영기법의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도입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국방경영기획평가단에 참여시키고자 한다. 민간의 선진경영기법 중의 하나인 린시그마 운동을 군에 적용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¹⁸ 또한, 선진 통합 물류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군 물류 체계를 혁신시켜 나갈 것이다.

21세기 군사혁신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장의 가시화 능력, 전장 정보의 실시간 공유 능력, 장거리 정밀 폭격 능력을 시스템차원에서 상호 연계시켜 디지털전장에서 싸우는 방법과 네트워크형 조직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에서는 합동전 및 네트워크 중심전, 사이버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합동지휘 체제를 발전시키며, 효율적인 국방경영 체제를 동시에 확립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은 경영혁신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접근을 융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¹⁸ 국방부, 『튼튼한 안보 구현을 위한 2013년 국방부 업무보고』, 2013년 4월 1일.

국방과학기술을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국방연구개발의 허브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였으나, 21세기에 이르러 경제효율성 제고라는 명분하에 상당 분야를 민간 연구개발분야로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점 육성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보안, 한국형 무기 개발, 종사 인원의 제약, 민간과의 공개적 교류 제한 등으로 인해 비인기 분야로 분류되기도 했으므로, 변화무쌍한 국제안보환경 속에서 국방과학기술은 전략적 의미가 농후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중점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비핵무기, 한국형 전장에 맞는 무기체계의 개발 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국방과학연구소를 국가전략적 중점 육성대상으로 다시 정책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래 <표 V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 동안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와 장비의 대외 수출이 3배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한다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의 목표를 군사 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통한 방위산업의 발전이다. 따라서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방산수출을 다변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이 국가의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표 VI-2 최근 5년간 방위산업 수출 실적(2007-2011)

(단위: 억 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45	10.31	11.66	11.88	23.82

출처: 국방부, 『2012 국방백서』, p. 199.

2012년 현재 국방비의 7% 수준인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2017년까지 매년 1%씩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의 핵심동력과 연계하여 국방 분야에서 무인, 로봇, 센서, 유도기술 등을 활용한 신무기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연계하여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 협정을 활용하여 사거리가 300~800km인 각종 미사일을 대폭 증강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체계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이와 아울러 방위력 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국방획득체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바, 방위사업의 정책 및 계획 수립기능을 국방부 직속으로 방사청에서 이전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기술 품질원을 국방부에서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마. 보람 있는 군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의 추진

보람 있는 군복무와 국민존중의 국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군인의 기본가치와 윤리를 확립하고 그 가치를 제일로 삼는 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군의 기본 가치와 윤리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에 나타나듯이 멸사봉공과 애국의 정신이요, 국방을 위해 더 성실하게 헌신하는 자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급하며, 진급에 떨어진 경우 진급자를 투서로 헐뜯지 않는 공정한 계임을 존중하는 윤리, 국가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사용하라고 준 재화를 목적 그대로 사용하는 풍토 조성, 후방보다는 전방을 더 선호하는 멸사봉공의 정신을 기본가치와 윤리로 삼는 군대, 장교들이 앞장서서 성폭력과 비

리가 없는 군대를 만들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병사들은 군인의 기본가치와 윤리를 숭고하게 실천하는 장교들을 본받아 군대의 기강과 질서, 군복무의 가치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며, 군대 내에서 상경하에의 정신이 현현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장병들의 공적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찾아서 보상하는 문화를 정립함으로써 보람 있는 군복무가 거국적으로 역사적으로 시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또한, 병사들에게도 군대복무 기간 중에 별도로 자아정립과 정신력 훈련의 기회를 주어 국가안보관과 인생관, 사생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병사들의 군복무 기간 중에 일인당 두 가지 기술의 전문성을 배양토록 하여 사회에 나가서 군대복무가 활용될 뿐 아니라, 군대복무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것이다. 국민 속의 군대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군대와 사회 간의 양방향 소통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북한의 증가된 위협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신중한 연구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축 여건의 조성과 그 여건의 이행상태를 점검해 나감으로써 실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군대 전체의 간부비율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2025년까지 간부비율을 40%로 제고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에 앞서 2017년까지는 장교는 24%, 부사관은 39%로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 복무한 장교와 부사관이 사회로 환원될 때에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여군에게도 군대복무의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일환책으로 여군 장교와 부사관의 비율을 점차 증가시켜 나갈 것이다.

VII. 맺음말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다. 튼튼한 안보가 없으면 경제발전도 문화융성도 사상누각이다. 튼튼한 안보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다. 그러기에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전쟁 협박, 도발에 대비하여 강력한 억지력을 보유하는 한편, 북한이 과거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남북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과거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던 남북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적인 관계로 점진적으로 개선 및 발전시키고자 한다. 한민족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북의 지도층과 지도층, 국민과 주민 사이에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견실하고도 평화스런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대결과 협박을 일삼는 북한 정권이 언젠가는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선택하여 우리의 진실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축 제의에 응해올 것이라고 믿는다.

동북아 차원에서 보면, 국가들 간에 경제적인 상호의존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이 미진한 상태에 있어서 동북아의 일반 국민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간에 위치해 있고, 한류 등 매력적인 소프트파워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중견국가로서의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활용함으로써 주변국에 대한 신뢰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동북아는 양자관계가 중심이 되어 있고, 상호 대결적 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박근혜정부는 국가들 간의 이기적 국익추구를 위한 경쟁의 장을 평화협력의 장으로 바꾸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위상과 한국의 글로벌 문제 해결능력을 다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세계의 후진국과 선진국,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글

로별 넥서스를 토대로 기여외교를 전개함으로써 한국은 마침내 존경 받는 세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적으로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최종 목표는 통일이다.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미루지 않고 평화적 분단관리를 통해 남북한이 공동 번영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한민족 전체와 세계인의 지혜를 모아서 평화통일에 이르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북한과 꾸준히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꾸준히 설득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력과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등 글로벌 문제 해결에 창의적으로 기여해 온 경험을 토대로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알 수 없지만, 남북통일은 저절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결연한 의지와 정부의 치밀한 전략, 국민들의 일치단결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도하는 분명한 평화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으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들이 통일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의지를 굳건히 하고 통일을 견인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 국방부. 『튼튼한 안보 구현을 위한 2013년 국방부 업무보고』. 2013년 4월 1일.
- 박근혜 대통령 후보 편집인협회 토론. 『연합뉴스』. 2012년 7월 16일.
- 박근혜 대통령 후보 언론 인터뷰. 2012년 9월 1일.
-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 외교안보통일 정책 기조 및 과제 발표문. 2012년 11월 5일.
-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취임사 -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3년 2월 25일.
- 박근혜 대통령. 『미국 상하양원 합동회의 연설』. 2013년 5월 9일.
- 프랜시스 후쿠야마. 구승희 옮김.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한국경제신문사, 1996.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새 정부가 추진할 국가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 2012년 10월 31일.
-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Vol. 90, No. 5, September/October 2011.
- 『한국경제』. 2013년 2월 22일.
-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2013년 5월 8일.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중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중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1)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들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김수암 외	24,000원

기타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경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예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곤, 이기현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예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예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외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Study Series

비매품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
(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www.kinu.or.kr

